

# “美, 구체적 사유 공유 안했다”… 아직도 이유 모르는 정부

## 美 ‘민감국가 지정’ 현안질의

외교부, 두달간 지정사실 모르고  
정확한 원인 파악 못해 정부 못매

홍기원 의원 “문제 원인 모르는데  
美서 해결방안 설명요구, 납득안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지난 두 달 동안 목록 지정 사실뿐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막판인 1월 초,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했다. 해당 조치의 실제 발효일은 4월 15일이며, 한국이 이전까지 민감국가 목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미국 에너지부와 관련한 양국 협력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고 부처 국장급들의 실무 회동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야당 의원 중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으로 민감 국가 목록 지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목록은 비공개로 작성해 관리하고 상대국에 사전 통지하는 절차가 없다”며 “과기부에서 예상되는 경로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가면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확인 등의 검토절차를 진행하는 등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제한이 진행된다”며 “한미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분야의 새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설명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의 답변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절차적 불편은 있겠지만 내용상의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냐고 묻자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가 없다”고 했고,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구체적 사유를 공유하지 않았다. 포괄적 기술 보안이라고 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간에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했다는 설명이 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부처에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모르는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기술보안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고 한다”며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해결방안을 설명하며 해제를 요구했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과거 한국이 처음 민감국가에 지정된 1981년이 2025년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981년도는 격변기였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 핵 개발을 고민해왔고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쿠데타 후 군부가 들어왔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서 대통령과 국방부 주요 인사가 독자적 핵무장론을 틈 나는 대로 제기했다.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 고위 선에서 이야기하니 미국이 긴장하지 않겠나.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시와 지금이 흡사하게 트라우마와 상황이 중첩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놓고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이슈에 대해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큰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안을 갖고 침소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7대1로 기각돼 버렸다. 인용하겠다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압도적 인용 거부, 터무니 없는 탄핵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게 되면 미국에서 보더라도 우리를 불안하게 보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청년 목소리 배제 ‘연금개혁’… 강제 갯돈 넣으라는 것”

국회 ‘모수개혁안’ 처리에 반발  
여야 3040 국회의원 8명 ‘반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계주가 정부라도  
젊은세대가 ‘못받는다’ 인식뎌 저항”

국회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여야 청년 정치인들과 차기 대선 주자들은 합의 과정에서 실제 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할 청년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을 지적하며 숙고를 거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추가로 군·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 지원 확대,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담았다.

연금개혁을 처리한 첫 주말인 지난 23일엔 연금개혁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국회의원 8명이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40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24일에도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연금개혁을 놓고 머리를 맞대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권 대선 주자들이다.

이준석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능

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며 “바로 연금 야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올바른 개혁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로 갯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갯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갯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라며 “계주가 정부라도 젊은 세대가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83명의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지자 당 지도부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공개 반대 기자회견도 있었고 논란이 있다”며 “덜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것은 연금을 이미 받는 분에게도 갑자기 올려주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

인데, 이미 받는 분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금을 내는 분들에겐 43%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갈되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있다면 소득대체율 43%는 미래세대의 노후를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면 소득대체율 43% 인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에선 연금특위를 통해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이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하루에 800억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3040 여야 정치인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연금특위 청년 의원 절반 이상 구성과 연금 재정 국고 투입 요구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저지 정치인 연대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젊은 층이 특위에 절반 정도 들어갔으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 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지금 제기되는 부분들을 모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합의는 최소한의 합의로 부담을 줄이고 수혜를 늘리는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 “국부펀드로 산업발전·불평등 완화 ‘두 토끼’ 잡아야”

기본소득 연구포럼  
‘K-엔비디아’ 뒷받침 세미나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운 ‘K-엔비디아’ 구상을 뒷받침하는 세미나에서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 산업에 투자해 산업 발전과 불평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엔비디아’ 구상은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집

중해 키워야할 첨단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후 성과가 나오면 국민과 기업이 골고루 나눠 갖자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를 주장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공산주의’적 주장을 한다며 비판해 논쟁이 일어난 바 있다.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위원장은 발제를 맡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및 과학법 도입,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딜 등 선진국들은 과거의 시장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

의 적극적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부펀드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공공 금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미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수익을 국부펀드에 투자해 사회적 안정 및 복지 향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알래스카는 유전 수익의 배당으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전 원장은 산업정책 지원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를 제

안했다. 해당 펀드는 공공이 운영하는 투자 펀드를 조성해 기업 지분 투자로 자산을 축적하고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형태다.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는 국가 전략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민간자본을 끌어와 혁신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전 원장은 정부가 국부펀드로 기업의 R&D를 지원하거나 임대료 등을 지원할 경우 추후 수익이 날 경우 펀드로 수익을 환류할 수 있고, 국공유 자산 운용·매각과 전과 등 매각대금 및 사용료, 기부 및 상속세, 자본이득세 신설, 국제 발행 등으로 펀드의 재원으로 삼

을 수 있다고 했다. 유전 원장은 초기 100조원으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매년 10% 금액의 재원을 추가하고 펀드의 연간 수익률을 4%로 가정했을 때, 30년 후 원금이 2407조원으로 늘어나고 1인당 연간 약 175만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윤형중 LAB2050 대표는 토론에서 TDX(전자식 전하교환기) 개발 사업, C DMA(코드다중분할접속) 등 국가주도 이동통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해 혜택을 본 것과 같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의 역할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